하반기 원구성 난항…상임위 공백에 인사청문회 비상

여야 법사위원장 놓고 대립
국회의장단 구성도 지연
'인청특위' 비상수단 등 가능성
광주국회의원 상임위 신청
국방위 없고 문체위 3순위 2명

21대 국회 전반기 임기가 29일로 종료됐지만 여야가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로 대립하며 하반기 원구성 논의를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은 하반기 상임위 배정 과정에 특정 상임위원회에 무더기 신청하고, 정작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해당 상임위인 국방위원회 신청자가 전혀 없었다. 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등을 위한 해당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기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30일부터 국회의장단도 없고 상임위 위원들도 결정되지 못하는 원 공백 상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무엇보다도 여야는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임위 구성은 물론 의장단 구성까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민주당은 이미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김진표 의원을 선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문제를 해결해야 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줘야 의장 선출을 위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원 공백 상태가 되면 국회 대부분의 기능이 일부 멈춰 서고, 장관 등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도 영향을 받게 된다.

실제, 국회는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를 비롯해 지난 16일 인사청문요청안이 넘어온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 하지만 29일을 넘기면 소관 상임위에서 이들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기존 상임위에서는 청문회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원 구성 협상 지연에 따른 상임위 공백이 드문 일은 아니지만 인사청문회가 영향을 받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 할 수 있다. 새 정부 출범과 후반기 국회 출범이 시기적으로 맞물리며 벌어진 현상이다.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더라도 인사청문회를 할 방법은 있다. 국회법 65조2의 3항에 따르면 상임위가 구성되기 전에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이 있으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청특위의 설치·구성은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제의한다.

상임위를 비롯한 원 구성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여야는 인사청문특위를 통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지만 원 구성이 되지 않는 상황 등을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장관들을 임명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 현행법상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송부된 지 20일이 지나면 이후 열흘 내에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역시 인사청문회가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줄 기회임을 고려하면 청문회를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하지만 특위를 구성하려 해도, 구성 권한을 가진 의장단 선출이 난망하다는 점이 논의를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한편 최근 민주당 의원의 하반기 상임위 신청을 마감한 결과, 광주지역 6명의 국회의원은 모두 1~2순위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신청하고, 인기 상임위인 국토위 등에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구 산업단지가 있는 의원들이 많아 해당 상임위인 산자위를 선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광주지역 의원 중 군공항 이전 작업을 위한 국방위를 1~3순위에 신청한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고, 그나마 문체위는 3순위 신청 의원이 2명 있었다. 전남지역 10명의 의원들도 지역 내 농수산업 인구가 많은 탓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청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모니터링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29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종합상황실에 마련된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모니터링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조직 이르면 내일 구성

단장 포함 총 20명 규모
장관 중간보고 받지 않기로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기능을 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이르면 31일 구성될 전망이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상정한다.

이는 윤 정부가 지금까지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 검증을 법무부에 맡기는 것이 골자다.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한다.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다.

관리단 전체 인원은 단장을 포함해 총 20명 규모다. 구체적으로는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찰 경정 2명 등이다.

정부는 지난 24~25일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했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다고 판단했고, 지난 26일 법제처 심사도 완료했다.

개정안은 지난 27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뒤,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은 사실상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곧바로 공포하면 바로 시행된다.

관리단 단장으로는 비(非)검찰 출신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인물들이나 감사원 출신 중에서 단장을 발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사가 맡는 인사정보1담당관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동균(46·사법연수원 33기)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법무부는 한 장관의 권한 비대화를 지적하는 외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의 중간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막말 논란에 부동산·아들병역까지 김승희 청문회도 '가시밭길' 예고

세종 특공으로 '갭투자' 의혹
식약처장→로펌 '이해충돌' 지적

청문회를 앞두고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과거 발언 논란과 이해충돌·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아빠 찬스' 논란으로 정호영 후보자가 낙마한 데 이어 김 후보자의 청문회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가장 먼저 김 후보자가 공직 생활을 할 당시의 부동산 문제가 불거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으로 일하던 2012년 세종시 도담동에 있는 '세종 힐스테이트' 84㎡를 분양받은 뒤 실거주를 하지 않고 '갭투자'로 5년 만에 팔아 1억원이 넘는 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아들의 병역을 놓고도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2016년 6월 관보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장남은 신체검사에서 5급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는데, 김 후보자는 당시 질병명을 비공개했다. 제2국민역은 전시 군사지원업무가 가능하다는 판정으로, 평시 병역은 면제된다.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지 두 달만인 2020년 7월부터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이력에는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식약처장, 국회 복지위원 등을 지낸 김 후보자는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를 전문으로 내세운 법무법인에서 근무했다. 이렇게 유관 분야에서 일을 한 뒤 다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오는 셈인데, 국민 눈높이에 적합하냐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국회의원과 식약처장 시절에 했던 문제성 발언들도 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개별 기록관에 대해 지적하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기억력을 치매와 연관 지어 발언해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막말 정치인"이라고 비판하며, 일부에서는 내정 철회도 요구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 안내

일시 6월 1일(수) 오전 6시~오후 6시
※ 코로나19 확진자 : 오후 6시 30분 ~ 오후 7시 30분

장소 지정된 투표소
투표안내문 또는 내 투표소 찾기(nec.go.kr)에서 확인 가능

준비물 신분증과 마스크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단, 화면 캡쳐 등 저장한 이미지 불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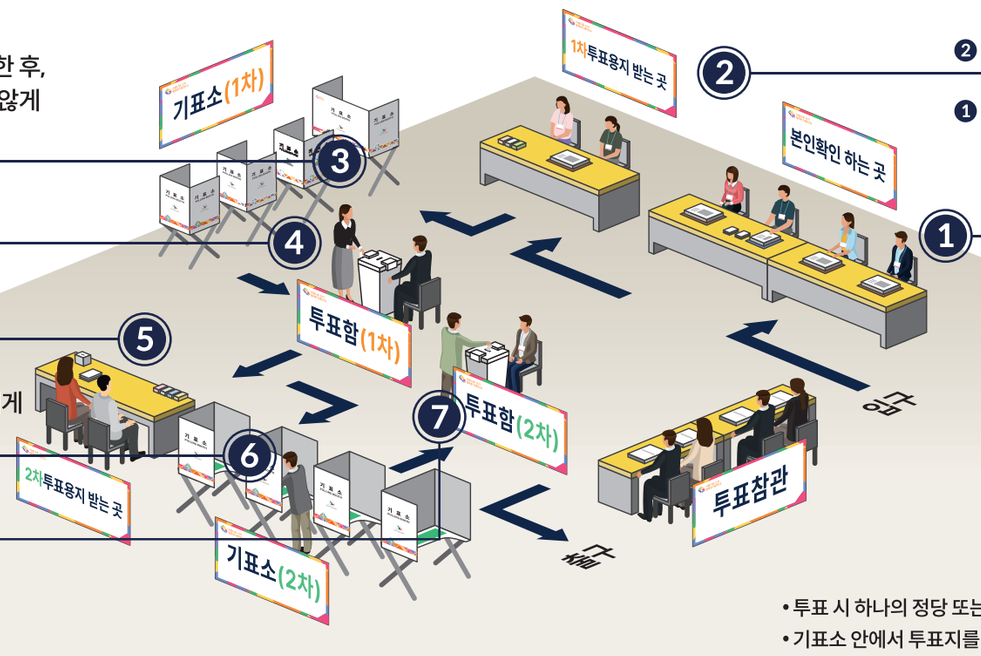
❸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한 후,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투표지를 접음

❹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음

❺ 2차 투표용지** 받음

❻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한 후,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투표지를 접음

❼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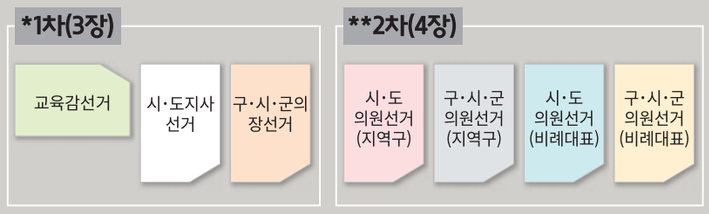
❷ 1차 투표용지* 받음

❶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선거인명부에 서명하거나 날인 또는 손도장)

• 투표 시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안 됩니다.
※ 투표지를 촬영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일에는 1차와 2차 두 번에 나누어 투표합니다.



세종시	(4장 일괄교부) 교육감, 시장, 지역구시의원, 비례대표시의원	
제주도	1차(2장) 교육감, 도지사	2차(3장) 교육의원, 지역구도의원, 비례대표도의원

※ 국회의원 보궐선거 실시 지역은 1차에 투표용지 추가 교부(7개 선거구)
※ 교육감선거 투표용지에는 기호와 정당명이 없으니 후보자 이름 확인
※ 무투표 선거구가 속한 지역은 해당 선거 투표용지 미교부
(해당 지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유효표와 무효표 예시